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대두

정부는 2017년 11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

-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주택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 중심에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

주거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전달체계의 정비를 통해 정책누수를 최소화하고, 수요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유로 대두

현행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주거급여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예를 들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18개 시군은 건축 및 주택관련 부서에서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3개 시군은 여전히 복지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중
- 즉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광역단위 주택정책과 ↔ 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주거복지 관련 전달체계가 시군단위에서는 주택관련부서와 복지관련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혼선을 야기

주거복지 전달 창구의 부재 및 복지갈매기 현상으로 인한 주거복지 사각지대화

- 현재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내 맞춤형복지팀의 지역사회복지 대상자 발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 단위인 읍면동주민센터의 경우 일반복지업무에 주거복지업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거복지 업무는 수동적인 대응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거복지 사각지대화 문제가 지속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증진의 필요성 대두

-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의 측면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

-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및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공의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

- 지자체 단위 주거복지센터가 있다면 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여 민과 관의 네트워킹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수행이 가능

- 지자체 단위 주거복지센터가 없다면 지자체 내 전담부서와 민간이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네트워크 채널 확보가 필요

-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는 대상자 발굴, 자원공유 및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확대·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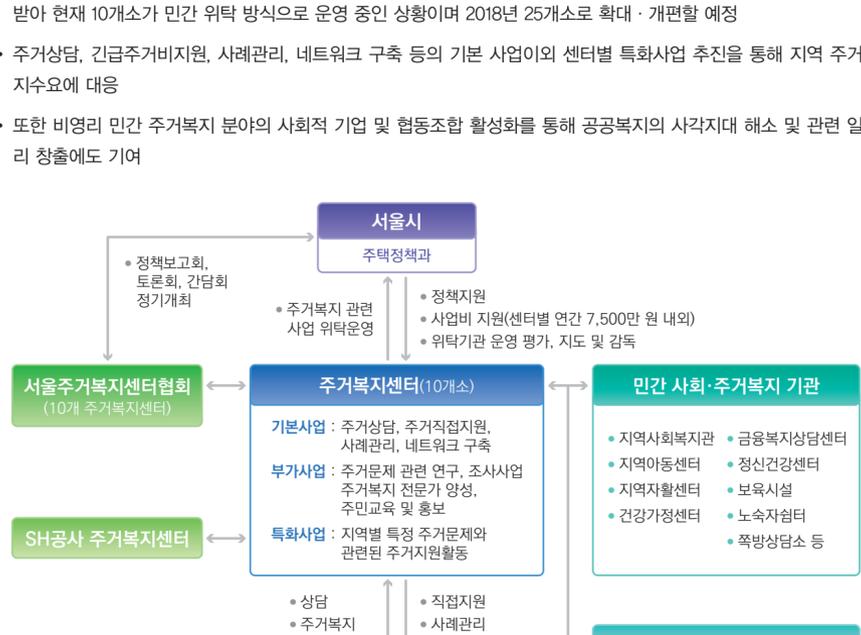
서울시의 사례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사회적 필요에 의한 지역시민단체 주도로 최초 설립된 이래 2012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현재 10개소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며 2018년 25개소로 확대·개편할 예정

- 주거상담, 긴급주거비지원,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본 사업이외의 센터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

- 또한 비영리 민간 주거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전달체계 및 협력거버넌스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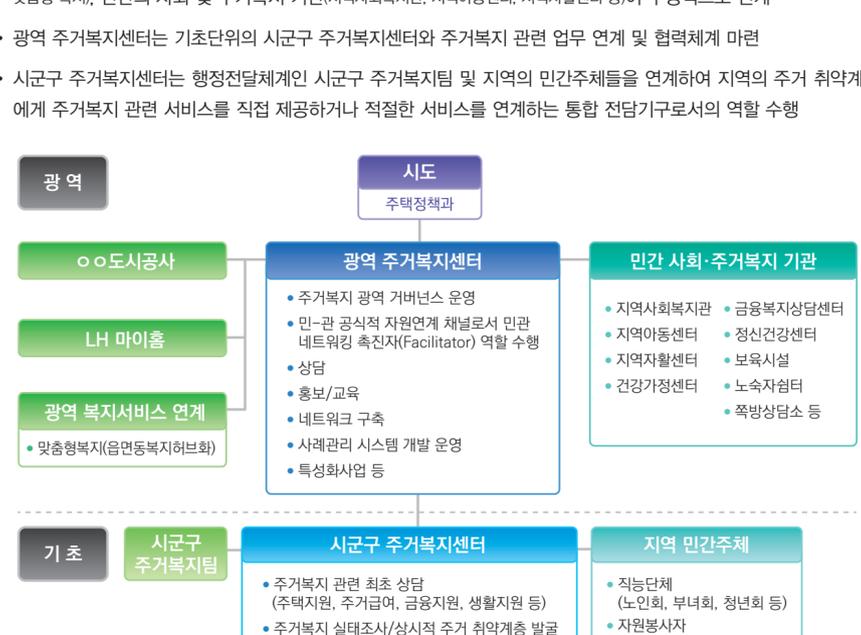
-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민과 관의 인식개선
- 민과 관의 자체 역량강화에 기반한 수평적 협의와 협력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주거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효율적·협력적 서비스 제공
-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실질적 주거의 질(quality of living) 증진

방안 1.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도, 지역도시공사, LH마이홈 상담센터, 복지관련 전달체계(읍면동 복지허브)에 따른 맞춤형 복지, 민간의 사회 및 주거복지 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이 수평적으로 연계

- 광역 주거복지센터는 기초단위의 시군구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 관련 업무 연계 및 협력체계 마련

- 시군구 주거복지센터는 행정전달체계인 시군구 주거복지팀 및 지역의 민간단체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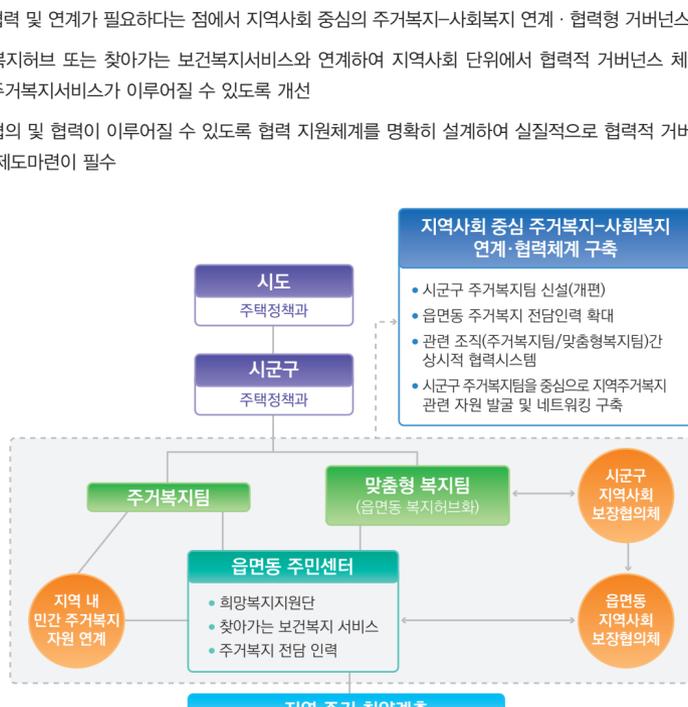
방안 1.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방안 2. 지역사회 중심 주거복지-사회복지 연계·협력체계 구축

-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예: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로의 정책 변화에 부응하면서, 사회복지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복지-사회복지 연계·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상시적 협의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지원체계를 명확히 설계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수



방안 2. 지역사회 중심 주거복지-사회복지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기존 행정전달체계 개편 + 주거복지 민관협의체 구축

- 기존 주택관련/복지관련으로 분산된 지자체 단위 주거복지 관련 전달체계를 주거복지팀(신설 또는 개편)으로 일원화하여 시도(주거복지팀)-시군구(주거복지팀)-읍면동(주거복지전담인력)으로 이어지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 주거복지 관련 행정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인 주거복지 민관협의체 구축

- 주거복지 민관협의체는 민과 관의 공동의 목표 설정 및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주도적 협력기구로서, 민과 관의 공식적·정기적 접촉을 촉진하는 역할



방안 3. 기존 행정전달체계 개편 + 주거복지 민관협의체 구축

▶ 참고자료 : 김상민·이소영(2018),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 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sangminkim@krla.re.kr, 033-769-9893)

지나호 보기 : 지자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박승규 연구위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시 경우 brief@kr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